

# 공공병원인 원자력병원의 역할 정립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방사선에 의한 연구 및 진료를 목적으로 지난 1973년 설립한 과학기술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인 원자력병원이 의료진의 이탈 및 집단 사퇴 예고 등으로 휘청거리고 있다고 한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암관련 연구는 원자력병원이 그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아 왔다. 하지만 지난 2001년 3월 보건복지부에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을 들여 설립한 국립 암센터가 개원하면서, 원자력병원의 의료진이 국립암센터로 옮겨갔고 이로 인한 원자력병원의 의료진 공백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암환자 치료라는 기능 중복으로 인해 2개의 공공의료기관이 경쟁관계에 놓이고 말았다.

원자력병원이나 국립 암센터는 모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여 만든 공공병원이다. 국립 암센터 건립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미 암센터가 원자력병원과 기능중복이 된다고 강력히 문제제기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 원자력병원 측에서는 절대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암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2개의 공공 의료기관이 정확한 위상과 역할의 정립없이 과기부와 보건복지부 부처에 각각 존재하고 있고, 최근 사태를 보면서 기능중복이 안된다고 하여던 말들이 과연 정당했던가를 되묻고 싶다.

이런 속에서 공공병원인 원자력병원 38명의 의사들의 4월 16일 집단 사퇴 예고를 하고 있고, 이런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원자력 병원의 발전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물론 의사들이 원자력 병원의 이후 전망을 위해 일반 직원들에게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이들의 집단행동의 중요한 명분이 되고 있으나, 그간 원자력병원노조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는 점에서 설득력은 없어 보인다. 지난 98년부터 공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조직 및 인력감축, 경상비 절감, 년·월차수당 120% 반납, 특별성과급 160% 삭감,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노동조합으로서는 결코 물러서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양보를 하였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는 사항이다. 과학기술부와 기획예산처 조차도 이러한 점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미 원자력병원의 구조조정은 끝났다고 이야기도 듣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의사들의 요구사항인 병원 발전과 구조조정의 문제는 추후 노사협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문제로 보인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공공병원인 원자력 병원에서 진료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병원들이 낭비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되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원자력 병원이 방사능의학과 암연구와 관련하여 국내최고의 의료진과 연구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원자력발전소와 방사능물질 취급시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비한 진료체계와 연구는 원자력병원

이 해야만 하는 고유한 역할이 있는 만큼, 우리는 새로 설립된 국립 암센터와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관계 속에서 암환자 치료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래왔다.

그러나 국립 암센터가 개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병원의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하고 있는 현 원자력 병원 사태에 대해, 과기부는 병원에서 알아서 하라고 수수방관하고 있고, 암환자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00억원을 들여 암센터를 설립한 보건복지부 역시 전체 국민 건강 차원에서 기존의 원자력 병원을 어떤 역할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또다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에 공공병원인 원자력 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한다.

하나, 과기부 산하 원자력 병원과 복지부 산하 국립 암센터 사이에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암환자 관리를 할 수 있는 역할과 방향 설정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두 개의 소관부처로 나누어져 있는 원자력병원과 국립 암센터를 하나의 부처로 이관하든가 통합관리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그동안 공공병원인 원자력 병원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보호나 생활보호대상 암환자를 전혀 취급하고 있지 않고 있고, 국립 암센터 역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국민의 세금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이들 병원의 역할이 일반 3차 민간병원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다. 이후 생계가 어려운 암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

셋째, 현재 원자력 병원 사태의 조속한 정상화뿐만 아니라 이후 원자력병원과 국립 암센터 운영이 진정 국민을 위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운영위원회나 이사회 등에 외부 공익위원을 포함하는 등 투명하고도 공공적 책무를 다하는 기관으로서 기능하도록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원자력병원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진료공백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원자력 병원의 문제에 대해 의료진과 전 직원 그리고 노동조합이 협력하여 난국을 극복하고, 나아가 원자력 병원이 진정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로 거듭나기를 바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새로 임명된 김영환 신임 과기부 장관은 원자력 병원의 사태가 또다시 낭비적인 정부 정책의 표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원자력병원과 국립암센터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명확한 제시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01 · 4 · 6

건강연대 / 경실련 / 참여연대 / 녹소연 / 서울YMCA